"대리 수술 등 범죄 예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서비스 저하 우려"

시민 "환자 기본권 보장"…의료계 "분쟁 늘고 영상 유출 위험"
광주·전남 병원 107곳 중 100곳 설치…전남 1곳 "수술실 중단"

개정 의료법이 25일 시행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시민들은 '환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환영하는 반면, 의료계는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수술실이 있는 병원은 각각 광주 84곳, 전남 82곳이며, 이 중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광주 57곳, 전남 50곳이다.

광주에서는 25일 기준 병원 57곳의 수술실 51곳에 CCTV설치가 완료됐으며 6곳에서는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50곳 중 49곳에 CCTV가 설치됐으며, 나머지 1곳은 더이상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시민들은 '대리 수술'을 비롯한 의료인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에 대비해 환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에서는 서구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병원 의사 등 6명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해 시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더욱 컸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기존에는 환자들이 의료사고를 당하거나 대리수술 등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환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해법이 생긴 것"이라며 "의료인의 피해는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일이다. 의료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술 영상 유출 위험이 있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수술실 CCTV가 해킹 등으로 유출될 수 있으며, 특히 유명인의 수술 장면이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간호사가 영상을 빼돌려서 원장을 협박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 회장은 "의료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의식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 환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의료행위 그 자체를 증거물 삼아 의사들이 소송당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며, 결국 의사들의 적극적인 진료 의욕을 떨어뜨려 의료 서비스의 질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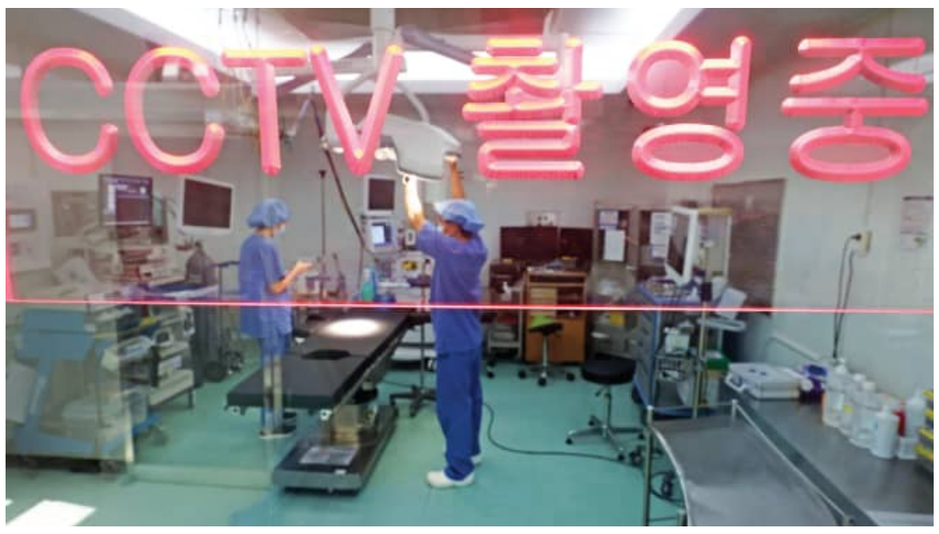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진정)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카메라는 고해상도(HD) 이상급이어야 하며, 수술실 안 전체를 사각지대 없이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 모두를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 측에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총 6가지다.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통신장애·사이버 공격 등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병원이 CCTV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술 장면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영상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환자·보호자 요청 없이 임의로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첫 날인 2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진상조사위 활동 미진…대책 세워라"

광주·전남 시민단체 촉구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활동 종료 시한을 3개월 앞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19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일보가 '활동 종료 3개월 남은 5·18진상조사위 내홍' 보도〈9월 22일자 광주일보 6면〉를 한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대책위는 "최근 조사위가 발표한 '2023년도 상반기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1개 직권조사 가운데 해결된 과제가 한 건도 없었다"며 "138건의 신청사건 중 결정을 내린 건 4건뿐이고, 여전히 75건은 조사중이고 59건은 조사조차 못하고 검토 단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조사위가 남은 3개월 내에 산적한 조사 과제를 마무리하기 어려운만큼 광주시와 시의회 등이 나서서 미해결 과제, 잔존 기록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평가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의회에는 차기 시민대토론회 주제로 '진상조사위 미해결 과제와 대책'을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훈 대책위 대변인은 "조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우선 조사위원들에게 책임이 있으며, 광주시·시의회·5·18기념재단 등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도 성찰해야 할 일"이라며 "조사위는 지역사회와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과 대책을 밝혀야 한다. 남은 과제에 대한 해법을 광주전남공동체와 논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발포명령자, 행불자 등 5·18 핵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애초 활동 시한이 2년이었으나 각각 1년씩 두차례 연장해 오는 12월 26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빛원전 수명 연장 초안 제출 2주 연기

10월 10일로 변경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지자체 검토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 〈9월 12일자 광주일보 6면〉이 제기되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초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25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기한을 기존 9월 26일에서 10월 10일로 변경했다.

한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전남도, 영광·함평·장성·무안군, 전북도, 고창·부안군에 전달했다. 실질적인 법적절차 행정 소요일수 확보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추가 검토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자체 검토기간 연장에 따라 주민 공람 시작일도 10월 6일에서 10월 19일로 연기됐다. 이후 12월 18일까지 60일간 주민공람이 진행된다.

12월 2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2024년 2월께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수원은 영광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기간을 10년 더 늘리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악취 잡는다" 광주 북구-광주시 TF팀 구성

업체에 개선 권고·법적 대응 검토

광주시 북구 한 도축업체의 악취문제〈9월 11일자 광주일보 7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와 북구가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25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와 북구는 지난 18일 북구 일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북구는 지난 5일 악취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북구의 한 육류 도축업체 인근에서 검체를 채취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북구는 검사 결과 기준치 20(공기희석횟수)을 초과한 30이 나와 15일 업체에 개선공고를 내렸다. 하지만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9월 한 달간 북구에 접수된 해당 악취 관련 민원만 311건에 달했고, 북구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민 서명을 받아 구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광주시청 3개 부서(농업동물정책과, 환경보전과,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와 북구청 2개 부서(기후환경과, 청소행정과)는 북구 일대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섰다. 북구는 광주시 민생사법경찰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서류절차를 밟고 있다.

북구가 해당 업체에 내린 개선공고 기한은 12월 15일까지로,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 과정이 3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TF팀은 각 부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지식 등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육류도축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난 22일 엔지니어와 계약을 마치고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호남고속철 지반 2년새 12㎜ 더 내려 앉아"

조오섭 의원 "46% 보수 안돼"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구간이 2년 전에 비해 평균 12㎜ 더 내려 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새 최대 72㎜ 더 가라앉은 구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의원이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호남고속도로 노반침하 발생한 구간 97개 중 45개(46%) 구간이 유지 보수되지 않았다.

2년전인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2월 감사원이 허용 침하량(30㎜)를 초과한 구간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보했음에도 이를 방치 했다는 것이 조의원의 설명이다.

노반은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다져놓은 땅으로 노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노반침하로 인해 고속철도의 특성상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지반 침하가 가장 급격히 진행된 구간은 어량교~화배교 구간으로 설계보다 174㎜ 더 가라 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영 기자 zzang@